"이태원 참사, 인파 대비 안한 人災"

〈인재〉

CNN · NYT · WP 등… "실시간 인원 모니터링, 많다면 밖으로 내보냈어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압사 참사로 세월호를 넘어서는 역대급 사상자가 발생한 것을 두고 31일(현지시간) 외신은 이번 사건의 원인은 당국의 대비가 부족해 발생한 '인재(人災)'라고 봤다.

CNN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규제했던 마스크 의무가 풀린 뒤 첫 핼러윈 행사인 만큼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때문에 생길 혼잡을 당국에서 충분히 대비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방송은 전했다.

방송은 "이번 핼러윈은 특히 서울은 물론 지방 거주자, 외국인 관광객 등까지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을 것"이라며 "인근 호텔과 여러 행사들이 사전에 예약이 꽉 찼다는 것만 봐도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 예상됐다"고 강조했다.

목격자들은 사상자가 대거 발생하기 전까지 군중을 통제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CNN에 밝혔다. 소셜미디어(SNS)에서는 비좁은 거리에 사람들이 몰려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CNN의 국가안보 분석가이자 재난관리 전문가인 줄리엣 카이엠은 "당국은 실시간 군중 수를 모니터링해야 할 책임이 있고, 사람들이 많다면 이들을 밖으로 내보내야 할 필요성도 감지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NYT)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포함 관계자들이 원인을 정확히 짚지 않은 점을 거론했다.

NYT는 "이들은 브리핑에서 '한국을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맹세는 하지만, 정작 군중의 통제 부족 등 이태원 골목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원인은 설명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문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 준비의 부족을 시인했다"며 "그 이유는 이날 진행되던 반정부 시위 때문에 경찰들을 (이태원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동시켰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수만 명이 몰릴 행사를 앞두고 이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WP는 "불과 이틀 전이 되어서야 이태원을 포함한 용산구는 코로나19 예방과 거리청결, 식당 안전점검, 마약류 사용 가능성 단속 등이 담긴 안전대책을 공개했다"면서 "하지만 군중을 통제하는 문제는 목록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태원 사고 인명 피해가 307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는 2014년 세월호 참사의 인명피해 규모를 넘어서는 수치다. 직전 집계치의 303명보다 4명이 늘었기 때문이다. 사망 155명, 부상 152명으로 각각 1명, 3명 증가했다. /뉴시스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서거석 교육감 · 우범기 전주시장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1일 전북도청 대공연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조문하고 있다.(사진 왼쪽) 같은 날 같은 장소에 방문한 우범기 전주시장이 묵념을 하고 있다.

"112 신고 대응 미흡"

윤희근 경찰청장 "특별기구 설치해 감찰"

사퇴의향 묻자 "결과 나온 뒤 상응 처신"

윤희근 경찰청장이 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 대국민 사과 입장 표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에 현장의 심각성을 알리는 112신고가 다수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112신고를 처리하는 현장의 대응은 미흡했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고 내용을 보면 사고 발생 이전부터 많은 군중 몰려 사고의 위험성을 알리는 급박한 내용들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참사 직전 파출소나 112신고 등으로 '사고가 날 것 같다'는 시민들의 급박한 경고가 있었음에도 경찰이 제때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비판이 거세지자 참사 발생 사흘 만에 경찰청장이 경찰의 현장 대응 부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핼로윈을 앞두고 서울경찰청에 다수 인파가 몰려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올렸음에도, 당일 경찰 인력 운용 계획 문서에 관련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올해 방역이 완화되면서 (핼로윈 축제에) 다수의 인원이 집결할 것으로 예상했고 보고도 있었기 때문에 용산경찰서에서는 많은 인원을 투입한다고 대비를 한 게 137명이었다"고 답했다.

윤 청장은 "경찰은 이번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모든 부분에 대해 예외 없이 강도 높은 감찰과 수사를 신속하고 엄밀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특히 사전에 위험성을 알리는 112신고를 받고 제대로 조치했는지에 대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112신고 처리를 포함해 전반적 현장 대응의 적정성과 각급 지휘관과 근무자들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등도 빠짐없이 조사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오늘부터 경찰청에 독립적 특별기구를 설치해 투명하고 엄정하게 사안의 진상을 밝히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관련 내용은 언론을 포함한 국민들에 소상히 공개하겠다"며 "제 살을 도려내는 읍참마속의 각오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의 부실 대응을 경찰이 자체적으로 들여다보는 게 적절하느냐는 지적에 윤 청장은 "서울경찰청이 아닌 경찰청에서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기구 설치를 염두에 두고 있다"며 "국민들이 우려하는 바를 충분히 고려해 경찰청에서 전례가 없는 특별기구를 통해 수사를 진행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청장은 "이번 사고를 지켜보면서 큰 충격을 받으셨을 국민들께도 관계기관장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 안전에 대한 무한 책임을 다시 한번 통감하면서 앞으로 이와 같은 비극적인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치안 책임자로서 책임지고 사퇴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현안 해결과 사고 수습, 향후 대책 마련이 급선무라 경찰청장으로서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이라며 "나중에 결과가 나왔을 때 어느 시점이 됐든 그에 상응하는 처신을 하겠다"고 답했다. /뉴시스

'참사 재발하지 않도록' … 정부, 3일부터 지역축제 합동점검

정부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지역축제에 대한 합동점검에 들어간다.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본부 총괄조정관 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3일부터 지역축제에 대한 정부 합동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한 수사 진행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며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합동 현장감식을 실시했고 이번 사례와 같이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6시 기준 이태원 사고 인명 피해는 307명으로 집계됐다. 사망 155명, 부상 152명이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1명 늘어났다. 중상자로 분류됐던 24세 여성이 상태가 악화돼 전날 오후 9시께 끝내 숨졌다.

사망자 중 외국인은 26명이다.

부상자 중에서는 중상 30명, 경상 122명이다. 부상자 중 111명이 귀가했다. 현재 41명이 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다.

전날까지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사망자 1명의 신원도 파악됐다. 이 사망자는 2005년생 여성이다.

김 본부장은 "어제와 비교해 중상자 1명이 사망해 사망자는 외국인 26명을 포함해 155명"이라며 "어제까지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사망자 1명의 신원도 다행히 파악됐다"고 전했다.

정부는 오는 5일까지 '국가애도 기간'을 지정하고 전국 지자체에서 총 59개의 합동분향소를 운영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유가족을 위해 세심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전담공무원을 1대1로 매칭을 완료해 지원하고 있다"며 "장례비는 유가족 주소지가 있는 지자체를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하고 화장시설도 부족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 피해자가 많은 점을 감안해 사상자가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심리치료와 정서 상담도 실시하고 학생들을 위한 안전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공교육 황폐화 주범"

공공성강화 전북교육네트워크 등

이주호 교육부 장관 임명 반대 성명

"공교육 황폐화 주범, 이주호 교육부 장관 임명 반대한다."

공공성강화 전북교육네트워크는 1일 '공교육 황폐화 주범, 이주호 교육부 장관 임명 반대'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으나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전국민적 추념에 동참하기 위해 성명서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이날 성명에는 전북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 위한시민연대와 정의당 전북도당, 진보당 전북도당 등이 함께했다.

이날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김인철, 박순애 씨보다 더욱 경악할 만한 인사를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바로 10년 전까지 공교육을 망가뜨리고 떠난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다시 데려오겠다는 것이다.

이주호 후보자는 'MB 교육의 황태자'로 불린다. 이명박 정부의 대선 공약을 만들고 인수위 간사와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을 거쳐 교육부 차관과 장관의 순으로 MB 교육의 설계와 집행 총괄을 책임졌다. 경제학자인 그의 경쟁·효율·선택이라는 어설픈 시장주의적 접근 탓에 공교육은 서열화·양극화로 몸살을 앓았고, 극단적 경쟁에 처참하게 무너졌다. 자사고, 일제고사 등 교육계의 대표적 폐해를 양산했다.

학생들은 초등학교에서부터 0교시와 방과후 문제 풀이를 해야 했고, 학교에서는 저학력자 결시 유도와 정답 유출, 답안지 조작 등 각종 편법으로 일제고사를 대비해야 했다. 시도교육청도 성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교부금 삭감을 막기 위해 일선 학교에 문제 풀이 교육을 압박했다.

교사에게 교원평가와 차등성과급 차등 비율을 강화하고, 학교 성과급까지 도입한 것도 일제고사와 같은 경쟁·평가 시스템으로 학교를 서열화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자사고와 특목고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는 입시몰입교육에 최적화 된 특권학교를 양산했다. 특권학교가 부모의 경제적 지위를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동안 일반고는 사실상 '슬럼화'됐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서조차 개발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2009 개정 교육과정을 강행해 국·영·수 편중 교육과정 편성을 유도했다. 교육의 입시 종속을 심화시켰다. 영어가 아닌 과목까지 영어로 가르치는 영어몰입교육 이야기도 나왔다.

'대입 3단계 자율화'라는 미명으로 졸속 도입한 입학사정관제는 '내신+수능+논술'에 허덕이는 학생들에게 '스펙 관리'라는 새로운 짐까지 떠안겼고, 결국 특권층 자녀들의 입학 창구로 변질하고 말았다. 대학 자율 기조하에 MB정부 시절 대학 등록금은 살인적으로 증가했다. 서울대를 법인화시켜 고삐 풀린 말처럼 만들었고, 반면 지역 대학들은 정부 재정지원을 끊어버려 지역소멸 위기를 부채질했다.

극단적 경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이었다. 그는 학생들의 기본적인 인권도 보장하지 않았다. 두발과 복장에 대한 반인권적 규제를 풀고 학생인권을 보장하라는 요구의 분출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자 학교장이 교칙으로 제한할 수 있게 하는 시행령을 통과시켜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시켰다. 학교폭력 사안 생기부 기재 방침을 강행해 학교를 교육의 장이 아니라 법적 공방의 장으로 만들었다.

이와 같은 공교육 파괴를 두고 볼 수 없다는 교육 주체들에게는 탄압의 칼을 빼 들었다. 교사·학생·학부모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진보교육감의 행보에는 고소·고발 남발로 제동을 걸었다.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말살하는 기획 수사에 발맞춰 재판이 완료되기도 전에 징계 방침으로 대량 해직을 유도했고, 민주주의를 촉구하는 시국선언도 탄압해 해직 교사를 양산했다.

자율이 아닌 통제, 소통이 아닌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교육계는 분열되고 갈등의 골이 깊어졌으며, 교육자치는 훼손됐다. 학생·학부모·교사는 권리를 박탈당한 채 오직 점수 경쟁에만 시달려야 했다.

10년 남짓 시간이 흘렀지만, 그에게 과거 교육정책에 대한 반성과 성찰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그동안 에듀테크 업체로부터 고액의 기부금과 후원금을 받았다. 'AI보조교사 도입' 등 에듀테크 활용 정책을 강조해 온 그의 행보를 떠올리면 장관 임명 이후 특정 업체들이 특혜를 누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들은 "과거를 기억하는 우리는 이주호 표 교육정책을 반면교사로 삼아 공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원한다"며 "우리는 교육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이주호 장관 후보자 임명에 단호히 반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지명 즉각 철회하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장은성 기자

농어업인 전기재해 피해 지원 근거 마련

나인권 도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임시회 본회의 통과

농어업인의 생산 활동 중 발생하는 전기재해에 대한 예방과 피해를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북도의회는 제395회 임시회에서 나인권 의원(김제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했다고 알렸다.

나 의원에 따르면 "2020년 한해 동안 도내에서 농업인이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한 전기재해는 2건으로 피해액은 1억3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0년 통계청 감전재해조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총 14명의 사상자 중 농어민이 2명으로 전기기술자(9명)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농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농어업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전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나 의원의 설명이다.

조례안에는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 피해복구 및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또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교육, 농어업 전기시설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농어업인의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해 지자체, 관련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경수 기자

도의회 환복위 · 문건위, 정례회 앞두고 연찬회 가져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병철)와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병도)가 행정사무감사 및 내년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각각 연찬회를 실시했다.

이번 연찬회는 오는 10일부터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감사 방향과 예산안 심사자료의 사전 분석을 위해 마련됐다.

한편, 제396회 전북도의회 정례회는 오는 8일부터 12월 13일까지 36일간 진행되며,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올해 2회 추경예산안 심의와 2023년 예산안 심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경수 기자